

'국정원 특활비 수사' MB정부로 확대

MB '집사' 김백준·김진모·김희중 주거지 등 압수수색... 추가 인사 연루 드러날 가능성 점쳐져

검찰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사건 수사가 이명박 정부로 확대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 이어 이명박 정부 국정원까지 검찰 사정권 안에 들어오면서 칼끝이 어디까지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날 오전 이명박 전 대통령 집사로 불렸던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진모(52)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김희중(50) 전 청와대 1부속 실장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가 초기 단계라는 점 등을 이유로 이명박 정부 청와대 인사에게 전달된 국정원 특수활동비 성격 및 규모 등 혐의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다만 검찰은 원 전 원장의 국정원 자금 사적 사용 혐의 등 수사 과정에서 이들 인사에게 자금이 전달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전 원장은 2011~2012년 해외 공작비 등 명목으로 200만 달러(약 20억원)를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 분석 및 관련자 조사를 통해 건네진 자금의 성격 및 배경 등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전 정부 인사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점쳐진다.

일각에서는 특수활동비의 '출발지'로 의심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수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하고 있다.

실제 앞서 진행된 검찰의 박근혜 정부



당무위원과 대치중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제4회의장에서 열린 국민의당 당무위원회에 참석한 통합 반대파 유성엽 장병완 의원과 당무위원들이 대치하고 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역시 이와 비슷한 전개를 보였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40억 수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특수활동비를 별도로 받아 쓴 혐의를 포착한 바 있다.

아울러 당시 국정원장들이 박 전 대통령이 외에 조윤선·현기환 전 청와대 정부

수석 등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매달 500만 원씩을 전달한 정황 등도 추가로 나왔다.

압수수색 대상에 오른 이들이 이 전 대통령 최측근이라는 점 역시 박근혜 정부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과 닮은 꼴이라는 평가다.

특히 김 전 총무기획관이 이 전 대통령의 '금고지기'로 불리고 김 전 실장이

1997년부터 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하면서 '문고리 권력'으로 거론됐던 만큼 이 사건에서 이 전 대통령이 자유로울 수 없을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대해 검찰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인 현 단계에서 상세한 혐의 내용이나 수사과정을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뉴스시스

남북 판문점 연락사무소 업무 개시 통화

남북이 12일에도 판문점 채널 연락 업무를 개시했다. 북한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참가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우리 측과 북측이 판문점 연락사무소 업무 개시 통화를 했다"며 "그러나 남북 간 후속 회담 관련 의미 있는 내용이 아직 오가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이어 "하지만 고위급회담에서 구체적인 윤곽이 나왔다"며 북한 선수단과 대표단의 방한(訪韓) 규모, 숙소, 이동경로 등에 대해 (판문점 채널)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오는 20일 스위스 로잔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남북 간 체육 관련자들 만남이 예정돼 있다"며 "그 전에 관련 실무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 일정에 대해서는 남북 간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아울러 "북한 대표단 방한에 있어 대북 제재와 관련한 사전조치가 필요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위원회나 미국 등 관련국과 긴밀하게 협의·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시스

민주당, 이달말까지 개헌 관련 당론 정리하기로

더불어민주당이 개헌 관련 당론을 이달 말까지 정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우원식 원내대표 주재로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개헌·정개 특위) 의원 회동을 열고 이 같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개헌특위 위원인 이인영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헌 관련 당론 확정 여부에 대해 "우리는 6월말 지방선거와 동시개헌을 목표로 하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2월말까지 국회 개헌안을 합의해 발의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론 확정 시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얘기를 안했다"면서도 "잠정적인 컨센서스는 1월말까지 정리하는 과정을 가지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개헌 관련 의원총회 소집 시기로 이달 말을 예상했다.

이 의원은 "원력구조 개헌 논의가 안 되면 의미가 없다"는 국민의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해) 개헌특위에서도 많이 하고 우리도 많이 했다"고 선을 그었다. /뉴스시스

격앙된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 "당무위 취소해야"

친안파 대거 불참 의원총회 대신 간담회 열려... "개헌·정개 특위 위원 재검토를"

당무위원회 소집에 반발한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와 중재파 주도로 12일 의원총회가 소집됐지만 친안파(친안철수)가 대거 불참하면서 무산됐다.

통합 반대파는 정족수 부족으로 대체된 의원간담회에서 당헌 위반을 이유로 당무위원회 취소를 요구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헌법개정 및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도 친안파 독식 의혹을 제기하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간담회에서 "오늘 해의, 지역, 개인 일정이 있어서 많은 의원들이 참석하지 못해서 할수 없이 의원간담회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신 조만간 전 의원이 참석해 당 진로를 놓고 무제한 토론을 하라고 제안했다.

이날 의원간담회에는 총리파인 김동철·

이용호·박주선·이찬열 의원, 반대파인 장정숙·박지원·조배숙·최경환·유성엽·박주현·김광수·장병완 의원, 통합파인 김관영·송기석·권은희 의원 등이 참석했다.

안철수 대표는 지난달 통합 추진 기자회견 이후 의원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통합 반대파는 당무위원회 소집이 당헌 위반이라고 취소를 요구했다.

최고위원인 박주현 의원은 "당무위가 열리려면 최고위가 (먼저) 열려서 결정을 해야하는데 지난 최고위까지 당무위 관련 전문위 관련 어떤 논의도 없었다"며 "갑자기 오늘 아침에 비공개 최고위가 열렸다는데 김동철 원내대표도 저도 연락을 못받았다고 주장했다."

조배숙 의원은 "당무위 소집은 항상 최고위에 안건으로 올라와서 논의됐다"며

"합당에 대해서 대부분 의원들이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으면 의원총회도 분명히 거치고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당무위를 소집한 부분은 비민주적이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의원은 당무위 소집에 대해 "국민의당은 당헌 소동을 바탕으로 민주적으로 운영한다는 당헌 3조 위반이다. 이게 민주적인 운영이나 반민주적 운영이다. 이게 패권이 아니고 뭐냐"며 "당무위 취소와 중단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안 대표의 대표당원 신규 인명 방침을 '제2의 유정희', '제2의 통일주체국민회의'라고 비판한 뒤 "안 대표의 말로가 박정희 전두환 안철수로 이어진다"며 "박근혜 전 비서실장과 박정희 전 두환 세습자가 합당하면 그게 당이 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 당무위를 원내대표가 중지 요구하고 중단시켜야 한다"며 "우리는 보수대야합 합당을 지지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개혁신당을 추진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합반대파가 특위를 친안파가 독식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김동철 원내대표간 신경전도 벌어졌다.

정동영 의원은 "개헌·정개 특위 위원 재검토를 요청해 달라. 친안파만 하는게 아니지 않느냐"며 "형평성이 (담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지원 의원은 "개헌·정개 특위 (위원) 안 대표 측근이면 다 시켜줄 것이냐 당직자들이 모든 것을 독식한 안 대표 특위 구성은 안된다"며 "원내대표는 이를 무효화시켜 달라"고 부인을 포함한 위원 재구성을 요구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누구는 할말이 없어서 없겠느냐"며 "적어도 의원 신상 얘기할 때는 그런건 기본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위 위원인 권은희 의원도 "계파에 있기 때문에 추천 된 듯 한 발언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뉴스시스

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 설치기로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선거·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 자격 심사를 위해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는 선거일 전 150일까지 설치해야 한다. 최고위는 위원회의 구성 권한을 당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민주당 최고위는 오는 17일 당무위원회 소집도 의결했다. 안건은 ▲2018년 중앙당 예산안 의결의 건 ▲지역위원장 인준의 건 ▲윤리심판원 관련 당규 및 윤리규범 개정의 건 ▲권역별 최고위원제 존폐 결정의 건 ▲정당발전방안 관련 당헌 개정안 발의의 건 ▲정당발전방안 관련 당규 개정의 건 등이다. /뉴스시스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14살 소녀들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_ 일곱 번째 이야기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어느 때와 같이 세 소녀는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

건너편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 한 분.

할머니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것을 알고, 어딘가에서 휠체어를 빌려와 가까운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가족이 올 때까지 모두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

14살 소녀들의 기지와 사랑의 실천. 따뜻한 학생들이 있어 오늘도 전북교육은 웃을 수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잊지 않습니다

가난한 학교엔 행복한 교육공동체

지난 4월 전주 우림중 1학년 여학생 세 명(최수빈, 배운서, 박민지)은 효자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쓰러진 70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곧장 가까운 정형외과로 달려가 휠체어를 빌려다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고, 할머니의 가족들이 올 때까지 병실에서 곁을 지켰습니다. 이 따뜻한 선행은 오늘 25일, 할머니께서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학교를 찾으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